“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9호 HYUNBULNEWS.COM 2025년 10월 1일(음력 8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얘들아 어서 나으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4일 동국대일산병원을 방문해 병마로 고통받는 난치병 어린이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했다. 9월 28일 취임 3주년을 맞은 진우 스님은 별도의 기념 행사 없이 자비나눔으로 종단 안정과 발전을 기원했다. 사진은 소아운동치료실에서 배밀이 훈련을 하는 최해진(2세 · 가명) 양을 격려하는 모습. 〈진우 스님 취임 3주년 기사 2면〉

글=김내영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인구주택총조사 앞두고 불교계 역량 ‘결집’

10월 22일~11월 18일 진행
총조사에 종교인구조사 포함
향후 10년 종교지형 지표로
정부 정책 계획 · 예산 영향
종단협, 전국 신도 현황 점검
조계종, SNS 등에 참여 독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10년 만에 ‘종교인구조사’가 포함되면서 불교계가 범종단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향후 10년간 한국 사회 종교지형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되는 만큼, 불교계는 적극 참여를 독려하며 정확한 불자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삶과 사회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가구 중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시행하는 국가 지정 통계 조사다. 5년마다 실시되며, 종교인구 조사는 10년 주기로 이뤄진다. 불교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된 1985년부터 신도 수 1위를 지켜왔지만 2015년 조사에서 개신교(19.7%)에 밀려 2위(15.5%)를 기록했다. 불교 신도 수는 1995년에 1015만4000명, 2005년 1072만6000명에서 2015년 761만9000명으로 300만명 이상 급감했다.

당시 불자 급감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사 방식이 불교계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사에서 표본을 대상으로 인터넷·면접조사가 병행됐는데, 불교는 인터넷 응답이 특히 적고 면접 응답이 많아 평균값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또 가구원 한 명이 가족 전체의 종교를 대표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인해, 가족 간 종교가 불일치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통계 결과에 종교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조사 수치가 정부 정책과 예산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종교인구조사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입안과 중장기 계획 수립은 물론,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 및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10년 만에 재조사 시기가 다가오자 각 종교계도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8월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사는 국가의 다양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기독교인들이 적극 동참해 교계에도 의미 있는 통계가 형성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불교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원불교 문패 달기’, ‘가정기원 독경하기’ 등 신도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도들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도록 원티스(WonTIS, 원불교 정보전산화 시스템)를 점검해 표본조사 지역 공시 시 신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불교계는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올해 7월 이사회를 열어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신도수 현황 점검을 주문하고, 표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불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밝히는 데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총조사를 앞두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범종단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9월 10일 열린 조계종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도 “총조사가 종교 지형을 가늠하는 공식 지표인 만큼 불교계 인구와 사회적 위상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조계종은 이미 종단 차원의 TF팀을 구성해 부서별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종단 홈페이지에 참여 안내 팝업창을 띄우고 전국 사찰에 공문을 발송해 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포교부에서도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매주 정기법회에 참석하지 못해도, 아직 재적 사찰이 없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를 사랑하면 우리 모두 불교 신자다. 당당하게 불자임을 알려 달라”라는 메시지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며 적극적인 응답을 요청하고 있다.

조계종은 조사 기간 종료까지 전국적 홍보와 참여 독려를 지속하고, 이번 총조사가 불교의 사회적 위상 회복과 미래 포교 전략 수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정교분리 헌법 조항에 위배”

조계종 종평위, 입장문 발표…특별법 철회 촉구

지난 8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이 세 번째 발의된 가운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이하 종평위)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법은 특정 종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종교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종평위는 9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대회의 관련 시설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지원위원회는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구조적 틀을 제공하고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전방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은 ‘국제 청년 교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특정 종교 행사”라며 “교리 전파나 선교 활동과 직접 관련된 종교 행사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로 종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이며 헌법상 종교의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평위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국가의 편향적 지원은 종교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종교 간 평화로운 공존과 국민화합을 해치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불교계, ‘종교편향’ 장동혁 대표 규탄

잇단 종교편향 발언 논란
조계종 중앙종회, 사과 촉구
“다종교 사회서 국민 분열”

“계엄도 하나님 계획”,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불교계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 대표는 9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합장 대신 목례로 인사해 종교지도자에 대한 예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는 9월 25일 서울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종교편향적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위원장 선광 스님과 위원 탄보 스님이 참석했다.

종교편향특위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특정 종교 예배 현장에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사건과 결부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치 문제를 특정 종교의 신학적 표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다종교·다문화 사회인 대한민국을 심각한 분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당 대표 선출 후에도 기독교 편향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교편향특위는 △장동혁 대표의 즉각 사과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 △국민의힘의 당내 종교편향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국민의힘에 공식 발송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항의 방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추석 연휴 배송 관계로 다음 호는 10월 15일자로 발행됩니다.

